

지하부터 지상까지 판치는 불법복제만화

도매상·대본소·대여점 등 영세 난립구조로 복제만화 유통 부추겨

연간 5천억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출판만화시장에 불법복제만화가 판치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알은 지하로 사장되고 거위는 빙사상태다. 특히 불법으로 복제, 유통되고 있는 만화가 대부분 일본만화여서 결국 우리나라의 출판만화시장은 '외화내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복제만화 약 50% 만화시장 점유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조사(〈출판만화산업 진흥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출판만화 제작시장은 약 179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만화제작과 대여시장에서 불법 일본복제만화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판만화는 최근 서울문화사·도서출판 대원·세주문화사·글논그림밭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세한 출판사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흥행성이 높은 일본만화를 복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일본만화 복제본 조사〉(1993)에 따르면, 이러한 복제만화의 약 40% 이상이 무등록 출판사에서 간행되고 있다.

일본만화 해적출판사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만화원본(세로쓰기 우철)을 뒤집어서 인화필름을 제작하거나 우리말 번역식자를 거꾸로 티자하여 붙인 뒤, '가로쓰기 좌철'로 쉽게 제작한다. 사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설, 폭력성 등 선정적인 장면은 일부 지우거나 가필하고, 대사 등을 수정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복제만화의 제작비는 정식 출판되는 경우의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

일본복제만화의 제작은 저작권법상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출판사의 고발이 없으면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일본만화출판사에서는 국내의 불법복제 현실을 알지만 시장확대를 위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 일본복제만화 출판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 단지 199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란과 폭력물 제작에 관한 위반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을 뿐이다.



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만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첫째는, 출판사가 도매상이나 중간상인(나카마업자)을 통해 서점이나 대본소, 도서대여점, 문방서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도매상들이 출판사에 제작비를 대주고 복제만화를 제작해 출판사 자체에서 차량을 동원해 유통하고 있다. 현재 도매상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제작과 유통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화전문 출판사는 독점계약을 맺은 만화만 취급하는 도서총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만화를 판매한다. 최종 소비자가 일반 독자인 경우, 다른 서적과 마찬가지로 총판에 정가의 65~70%에 판매하고, 총판은 이를 서점에 정가의 70~75%로 판매한다. 최종 소비자가 대본소나 대여점, 문방서점인 경우 출판사는 총판과 도매상에 공급하고 도매상은 이를 대본소나 대여점, 문방서점에 정가의 80~85%로 판매한다. 현재 도매상은 동대문이나 종로5, 6가에 주로 몰려 있다.

정상적인 유통루트를 거치지 않는 불법복제만화는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가에서 50~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2000원에 판매되는 불법복제 만화는 무등록 출판사의 적판차량으로 대본소, 대여점, 문방서점에 700~1000원 선에서 공급하는 대신 반품을 받지 않는다.

이들 불법적인 출판사와 도매상은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도매상이나 대본소 또는 대여점이 이러한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알면서도 정품보다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묵인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진을 높은 해적판 선호

불법적인 유통과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출판사와 도매상·서점·대여점·대본소 등의 영세난립 구조 때문이다. 도매상들의 과당경쟁 때문에 유통마진이 낮은 정품만화에 비해 마진율이 높은 해적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총판과 도매상에서 정품만화는 5~10%의 유통마진을 남기지만 해적판 만화는 15~20%, 심하면 30~50%의 마진율을 남긴다. 또한 독자적인 도매상을 갖춘 출판사도 있고 기존에 맷어온 거래관행 때문에 소매상에서 복제만화를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만화시장에서 해적판 출판사들이 무시하지 못할 역할을 담당했다는 지적도 많다. 만화평론가 백정숙씨는 "해적판으로 유통된 만화가 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면 이를 정식계약해 다시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적판이 시장검증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복제만화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불법 유통되는 만화는

불법복제만화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기 때문에 음란성과 폭력성이 심각하고 독자들의 만화취향을 저질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복제만화는 정상적인 출판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만화전문 출판사들의 의욕을 꺾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유통과정인 만화 도매상은 주로 종로 5, 6가에 몰려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기 때문에 음란성과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만화출판인협의회 박봉희 회장은 "음란성과 폭력성이 심한 일본만화가 범람하면서 독자들의 만화취향이 거칠어졌다. 이러한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한국만화도 저질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복제만화는 정상적인 출판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만화 전문출판사들의 출판의욕을 꺾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문화사의 김영한씨에 따르면, 정식계약을 체결해 유통되고 있는 만화조차도 해적출판물이 판쳐 판매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복제만화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일본복제만화의 제작과 유통 및 소비 영역에서 광범위한 자본이 만화자본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복제만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하다. 복제만화는 번역이 조잡하고 또한 만화의 배경이 일본인지 한국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한국적 상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손충호 부장은 "일본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번안된 일본복제만화들은 결국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도 모르게 일본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 박천홍 기자